

골재 채취장에 직불금 '한심한 행정'

나주시·구례군 감사서 드러나… 징계 공무원에 표창도

나주시와 구례군이 용도 변경된 농지에 대해 현장 확인없이 쌀 직불금을 지불한 것을 비롯 직원들의 징계 기록을 누락시키는 등 공무원의 인사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도의 '2008 나주시·구례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해 골재채취 등의 목적으로 전용된 15필지의 농지에 대해 현장

확인없이 101만원의 쌀 직불금을 지급했으며, 구례군도 용도가 바뀐 3필지의 토지에 대해 3년간 11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나주시는 또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인사 자료를 전산 입력하면서 A씨의 형별 내용(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이 A씨의 형별내용이 빠진 인사 기록카드를 토대로 2006년 명예퇴

직시 1계급 특별승진 및 퇴직수당 2천 4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나주시는 2007년도 공무원 근무 평정과정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13명에 대해 최고 2.0점에서 최저 1.0점까지 감점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점 처리하지 않았고, 종합평정 서열 명부 확정시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

구례군도 감사결과 금품수수나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3명의 직원들에게 2007년에 표장을 수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례군이 지난 해까지 미산면에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조성한 지리산야생화타운은 설계서상 식재되어야 할 금계국과 까치수염 등 34종의 초화류가 제대로 식재되지 않거나 말라죽어 총 3천3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박현철 광주시 감사관실 조사담당 등 관계자들이 28일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일대에서 공무원 쌀 직불금 수령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토 분열 '광역경제권' 중단을"

민주 정세균 대표 오늘 국회 연설… 규특법 진통 예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밟아붙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국토분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중단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됐으며 '광역경제권 계획'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역발전특별법도 대폭적인 보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밟아붙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국토분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한다.

정 대표는 이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난 40년 동안 현법에 보장된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현법마저 무시하고 국토분열적 정책을 추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정 대표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광역경제권 계획의 종단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라며 "마판 대표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날 국회 연설로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는 효과를 갖게 되며 이는 곧 정기국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상정할 지역발전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한 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발전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광역경제권 계획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폭적인 내용 수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역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砍삭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이 예산 반영에 반대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린다

광주·전남 4,772명 적법성 여부 조사 착수

'쌀 직불금'을 받은 광주·전남지역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자진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가운데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한 확인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 본청과 5개 구청 546명, 전남도 본청과 22개 시·군 그리고 산하기관 4천226명 등의 자진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날부터 본인과 배우자, 동일가구 내 직계 존비속의 직불금 수령 적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시·도청 등 각급 기관들은 자진신고 내용상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경작증명서 제출을 요구

하는 등 소명기회를 준 뒤 현장조사 등 추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쌀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기준'에 어긋나게 직불금을 탄낸 것으로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명단과 조사 결과를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농도라는 지역적 특성상 자진신고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단순 신고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신고에서는 공직자와 떨어져 사는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받았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모르고 신고한 경우도 상

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신고자 가운데 3~4명이 본인이나 가족들이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신고한 사례가 있는 만큼 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자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의 조사 결과를 취합해 11월 초 부당수령자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일부 기관의 확인조사가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합된 결과의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심사 등을 통해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단된 공무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감사원 1급 이상 고위직 12명 사의

사무총장 등 쌀 직불금 파문 책임

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28일 "최근 감사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직들이 사의표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내부에서 쌀직불금 사태를 둘러싼 인적쇄신뿐이 본격 접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6명과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6명이 개별적으로 김 획득 원장에게 사의의 뜻을 전달했다"

취임한 뒤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쌀직불금 사태가 터져 감사원장에게도 면목이 없다"며 "당시 감사원의 쌀직불금 감사결과에 대해선 뜻밖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일단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일단 고위직들의 사의표명을 즉각 수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쌀직불금 감사경위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 국회의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만정

- 김종우



먹고 살기도 힘겨운 마당에...

여수 등 전국 14곳 오늘 재·보궐 선거

2008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29일 여수 지역을 비롯, 전국 14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관련기사 5면>

이번 재·보궐 선거는 지난 5월6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여수시 바 선거구 등 기초의원은 9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은 3곳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선거 지역에 설치된 195개 투표소에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개표 결과는 밤 10시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데도 민심의 풍향계라고 할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천 지역 기초의원 선거 외에는 없어 정치 적 현안에 대한 민심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하반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누가 거머쥐느냐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여수시 바 선거구에는 민주당 이선호(48·한영대 겸임교수) 후보와 민노당 김상일(46·민노당 여수시 민생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 2명이 출마했다.

한나라당은 영남권 선거구 8곳에 서의 전승을, 민주당은 호남권 선거구 2곳, 자유선진당은 충청권 선거구 3곳에서의 압승을 기대하고 있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입/경력사원 모집공고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해동건설과 함께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선도할 주역을 찾습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분야	부문	총 시자격	비고
토목	* 도로·환경·토지 농업·항만·고랑	* 경력: 해당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 * 신입: 2008년 7월 졸업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 영어 가능자	
건축 (기계)	* 국내·외개발(PF) 사업	* 개발사업 및 영국(SOCIT/K) 유경험자 * 신입: 2008년 2월 졸업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 영어 가능자	
관리	* 회계·총무 * 민사	* 해당분야 출입증서 3년 이상 유경험자 * 영어 가능자	
공통사항		1. 해당분야 자격증(기술사 소지자)	해외 근무 가능자

2. 전형절차

① 1 차 : 서류전형

② 2 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 ① 신입 : 자필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즐암(예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전학증명서, 자격증서
- ② 경력 : 자필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서

4. 제출기한 및 문의처

- ① 문의처 : 해동건설(주) 기획관리팀 인사담당 T) 062-233-0040, 02-2198-5114, F) 062-233-0048, E-mail : myden@ehaedong.com
- ② 제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58-2, E-mail : myden@ehaedong.com
- ③ 제출기한 : 2008. 10. 30. 18:00까지

5. 기타

- ①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② 이력서 상단에 회망연봉, 지원분야 기재비(경력)
-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④ 입사지원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핵격이 취소됨
- ⑤ 국가 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함

© 해동건설(주) 기획관리팀 인사담당

© 062-233-0040, 02-2198-5114, F) 062-233-0048, E-mail : myden@ehaedong.com

수완지구

분월드 메디컬 센터 양 지하1층, 지상5층

- ▶ 수완지구 최고 중심상권
- ▶ 일일교통량 최다 승강장 열
- ▶ 병·의원 임점 최적위치
- ▶ 수완지구 최고위치
- ▶ 경쟁력 있는 최저분양가격
(선점의 기회)
- ▶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환영
- ▶ 2009년 3월 준공

·현장을 방문하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치에 반하고 가격에 놀라는 그곳
월드메디컬센터
☎ 062) 952-1033, 010-7723-1033

산행 안내 18면 게재

제권 판결

시 건: 2008카원 309

신청인: 김정호

판결: 광주 등 소례동 440-4 아이파크 102동 1303호

이전목록 기사 등에 대해서 2008. 7. 18. 광주(제10:

0